

## 경제 불안 해소를 위한 긴급 정책 제언

- 경제 위기시 재정의 역할 제고

2008. 10.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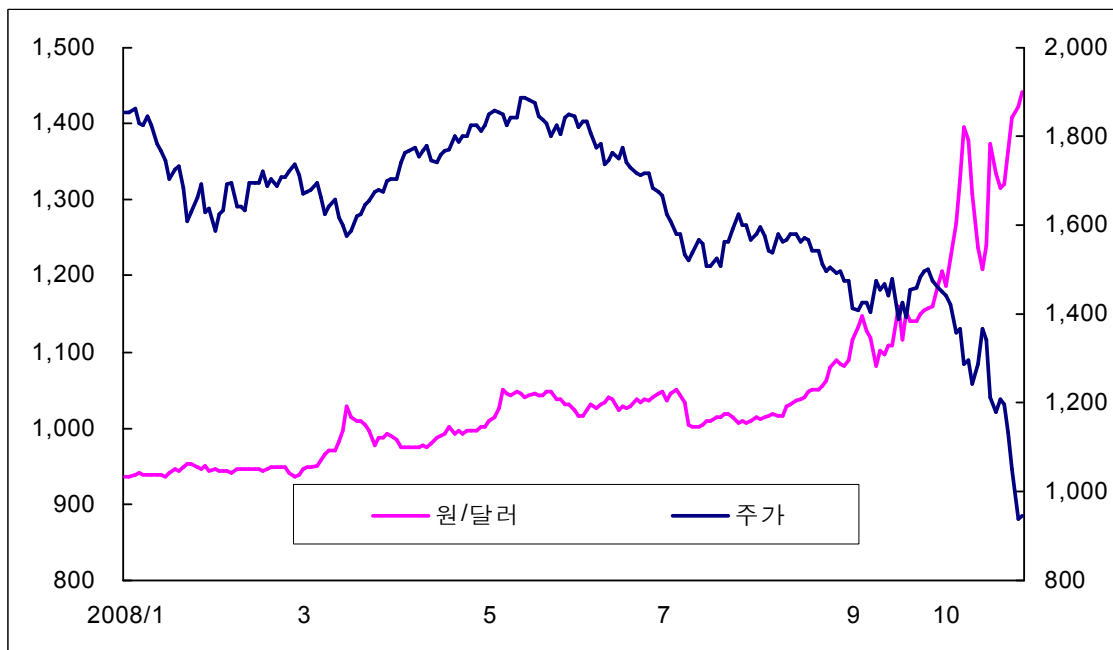
1. 금융 불안 지속
  2. 실물 경기 침체 심화
  3. 향후 전망 및 정책 과제
- <보론> 경제위기시 재정의 역할

## 1. 금융 불안 지속

○ (국내 금융 시장 불안정 지속) 원/달러 환율 급등세가 지속되고 주가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CD 금리도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원/달러 환율 급등세 지속 : 글로벌 달러 강세, 외국인의 역송금 수요, 수입 업체 결제 수요 등의 요인에 의해 환율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음
  - 원/달러 환율은 10월 들어 급등세를 보여 1일 1,187원에서 10월 27일 현재 1,442.5원으로 44.5원 급등
  
- 국내 주가 하락 가속 : 국내 주가는 글로벌 증시 급락, 세계 경기 및 국내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 국내 주가 또한 10월 초 1,439.67에서 하락하며 10월 24일 1,000 선이 붕괴되고 10월 27일 현재 946.45를 기록

< 최근 원/달러 환율 및 주가 동향 >



자료 : 한국은행.

- **CD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 : CD 금리의 상승세 지속으로 대출 금리도 상승하면서 개인과 기업의 금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CD 금리는 10월 13일 6%대에 진입한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며 10월 24일 6.18%까지 상승
  - 그러나 한국은행이 27일 긴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5.00%에서 4.25%로 0.75% 인하하고 은행채를 환매조건부증권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CD 금리는 10월 24일 6.18%에서 10월 27일 6.04%로 하락
  
- **국고채 금리는 하락** : 한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안전 자산 선호 현상으로 하락세를 나타냄
  - 9월 26일 6.01%까지 상승했던 국고채 금리는 10월 27일 4.52%로 급락

< CD 및 국고채 3년물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2. 실물 경기 침체 심화

○ (실물 경제 침체 가속) 내·외수 동반 침체 상황이 지속되면서 2008년 3/4분기 국내 실질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4.8%에 비해 0.9%p 감소한 3.9% 기록하며 실물경제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음

- 내수 경기 악화 : 내구재와 서비스 소비지출의 감소로 민간소비의 위축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주택 시장 침체로 건설투자도 동반 부진 현상이 나타남
  -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8년 3/4분기 1.1% 기록하여 2007년 3/4분기 4.8% 이후 4분기 연속 하락세를 지속함
  - 더욱이 건설투자 증가율은 0.9% 감소하여 2008년 1/4분기부터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함
  - 반면에 설비투자 증가율은 기술적인 반등세를 나타내며 2008년 3/4분기 4.9% 증가함
- 대외 거래 부진 : 자동차, 컴퓨터, 반도체 등의 부진으로 인한 재화 수출 부진과 고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가격 기준 재화 수입이 증가하여 대외거래 악화 현상이 나타남
  - 2008년 3/4분기 재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1% 증가하여 전분기 12.5%에 비해 4.4%p 감소됨
  - 2009년 3/4분기 재화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0.4% 증가하여 전분기 9.2%에 비해 1.2%p 증가됨

### < 내외수 경기 추이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7년					2008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국내총생산	4.0	4.9	5.1	5.7	5.0	5.8	4.8	3.9	
내수	민간소비	4.1	4.4	4.8	4.6	4.5	3.4	2.3	1.1
	설비투자	10.9	11.0	2.3	6.5	7.6	1.4	0.7	4.9
	건설투자	3.7	1.6	-0.1	0.4	1.2	-1.1	-1.2	-0.9
대외 거래	재화수출	10.5	10.3	9.0	17.7	12.0	12.0	12.5	8.1
	재화수입	9.6	10.9	5.1	17.6	10.9	11.1	9.2	10.4

자료 : 한국은행.

### 3. 향후 전망 및 정책 과제

#### 1) 향후 전망

○ (경기 부진 심화 예상) 세계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고 국제 금융 시장도 안정을 찾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국내 금융 시장은 물론 실물 경제의 복합 불황 상황은 내년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2009년에도 세계 경기 침체 가속 : 미국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으로 전이될 것으로 보여 2009년에 세계 경기는 부진세가 이어질 전망
  - 세계 : IMF 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 전체로 2009년 성장률은 2008년의 4.1% 보다 낮은 3.9%를 기록할 전망
  - 선진국 : 선진국 경기는 2008년 1.7%에서 2009년에는 1.4%로 하락
  - 개도국 : 개발도상국 역시 2008년 6.9%에서 2009년에는 6.7%로 하락
  - 금융불안의 실물부문 전이 : 미국 금융시스템 및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은 2009년에 투자부진, 고용시장 악화, 소비감소 등 실물부문으로 전이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 국내 금융 불안정성 지속 : 세계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 시장 및 환율 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미국 및 유럽 증시가 하락세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국내 주식 시장의 빠른 회복세가 힘들 것으로 평가
  
- 경제성장률 하락세 유지 : 금융불안에 따른 실물경제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2008년 4/4분기와 2009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3% 초반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2008년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3%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2009년 상반기에도 3%대 초반의 낮은 성장률이 이어질 전망

## 2) 정책 과제

○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안정 도모)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극도로 불안정해져 있어 청와대, 정부 각 부처, 중앙은행, 관련 정부기관 등은 사전적이고 충분한 경기 부양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여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안정을 꾀해야 함

- **초당적 협력** : 여야는 이번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에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위기 해소는 물론 정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함
- **노사정 협조 강화** : 한편, 노사정 협력 강화를 통해 범국민적 경제 위기 극복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기존의 노사 관계의 전환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함
- **국민들의 위기 극복 동참 유도** : 여유 계층을 중심으로 '주식 10주 더 사기', '외화예금 통장 만들기' 운동 등을 전개
- **국가 IR 강화** : 국내 외국인투자자들과 해외에 있는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국가 IR(International Relations, 투자관계 기업 설명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유치

○ (금융시장 안정화) 금융위기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기발표된 금융 대책의 조속한 국회 처리와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증시 대책, 추가 금리 인하, 글로벌 공조 등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국회 신속 처리** : 국회는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을 완화시키기 위한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임
- **증시 유동성 공급 대책 고려** : 증시 하락이 심화될 경우에 대비, 주식시장 유동성 공급 방안을 검토
  - 또한 펀드 유출을 막도록 펀드 판매사 및 자산운용사별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 마련
  - 한편 은행들로부터 자금 유출을 방지하도록 예금보장한도 확대를 추진

- 추가 금리 인하 검토 : 한국은행은 실물 경기 위축 방지를 위해 향후 경기 상황에 맞게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할 것임
- 국제 공조 강화 : 신흥 경제국이 포함된 G-20 등과의 다자 협력과 한·중·일 지역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추가 가능한 금융 안정 대책 >

방안	내용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추가 자금 공급	- 펀드자금 인출사태에 대비하여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 대해 추가 자금 지원
펀드 수수료 인하 유도	- 펀드 수수료를 조기 인하를 펀드 판매사와 자산운용사가 결정하도록 유도
예금보장한도 상향 조정	- 현행 5,000만원인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
기준금리 추가인하	- 경기 상황을 검토해 추가적으로 인하
증권거래세 인하	- 증권 거래세의 세율을 인하하여 거래 활성화 유도
은행 원화유동성 비율 완화	- 현행 100% 이상 유지해야 하는 원화유동성 비율을 하향 조정
국제 공조 강화	- G-20 등과의 다자 협력과 한·중·일 지역 협력 강화

○ (내수 활성화) 물가 안정, 가계 부실 예방 등을 통한 소비 진작이 시급하며, 과감한 투자 활성화, 부동산 활성화 정책 등의 시행이 필요

- 물가 안정 : 중기 물가 안정 대책 수립 및 실시, 환율 안정, 공공요금의 과다 인상 억제, 서민층 생필품 중심 한시적 관세 인하 품목 확대, 유통체계 및 에너지 효율성 강화, 특소세 인하 등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
  - 정부는 중기 물가 관리 목표를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향후 3년 정도 기간 내 물가 전망에 근거한 중기 물가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
  - 최근 비용 상승에 의한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환율 안정을 통해 비용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해야 할 것임

- 또한 공공요금의 과다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물가 안정은 물론 서민 생활의 안정에도 힘써야 함
  - 한편 서민층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시적인 관세 인하 정책도 대상 품목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임
  - 나아가 석유류나 농산물 등의 국내 유통 체계 개선, 에너지 절약 상품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등의 정책 보완이 필요함
  - 자동차, 유가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세율 또는 세액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서민 부담을 감소시킴
- **가계부실 예방** : 고용 창출력 제고, 저소득층 가계부채 만기구조의 장기화 지원책 조기 실시, 개인파산제도의 유연성 및 투명성 제고, 서민 금융 안정화 등을 강구
- 주택금융공사의 기능 확대 등 정부 관련 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저소득층 가계 부채의 만기구조의 장기화를 유도함으로써 급격한 가계 부채 조정에 따르는 충격을 완화
  -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지원의 활성화 및 관련 제도 간소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연쇄 파산을 미연에 방지. **최악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조건부 부채 탕감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현재와 같이 은행권 비중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는 서민 금융기관이 활성화될 때까지 은행의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임
- **과감한 투자 활성화 정책 추진** : 수도권 규제 완화, 농지와 산지 등의 공장 부지로 용도 전환 허용 등을 적극 검토
- **수도권 규제 대폭 완화** : 반도체, 정보기술, 첨단기계, 녹색산업 등 신유망 산업 부문의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를 해소
  - **공장 부지 확대** : 유휴 농지와 보존 가치를 상실한 산지의 산업 용지로의 전환 허용
- **부동산 경기 활성화 보완 대책** :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계 및 중소기업 부실 사태를 방지해야 할 것임
- 부동산 거래세 경감과 관련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가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 (재정의 역할 강화) 기존 감세 및 부동산 정책의 조기 실시, 과감한 재정 지출 증대 등 급속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보론> 경제위기시 재정의 역할 참조)

- 감세 및 부동산 정책 조속 추진 : 우선,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중심으로 하는 9.1 감세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국내 소비와 투자의 급격한 침체 예방  
· 또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과 규제도 완화 정책 역시 차질없이 추진
- 재정 중기 균형 추구 : 또한, 2009년부터 3년간 과감한 적자재정을 시행함으로써,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통합재정수지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998년, 1999년 3년 연속 적자(각각 -1.4%, -3.9%, -2.5%)를 기록했으나, 그 후 8년 연속 흑자를 기록  
· 2008년에도 대규모 흑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2009년부터 3년 동안 과감한 적자 운용하는 데에 여유가 있는 상황임  
· 2009년 총예산 10조 원(2009년 예산 209.2조 원의 약 5%) 증액을 추진하여 이의 50%를 건설 및 서민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형 SOC 투자에 지출함

○ (고용 창출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확대, 중소기업 고용 지원 강화, 청년층 취업 지원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단기적인 고용 창출력을 높여야 할 것임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확대 : 고령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확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약자 고용 촉진 장려금'의 도입, '맞춤형 고용 지원프로그램'의 도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확대 노력이 필요함
- 중소기업 고용 지원 확충 : 지역 인재 채용 촉진 지원, 지역 중소기업 투자 지원 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지역 중소기업 고용촉진 특별 프로그램'과 같은 정부 종합 중소기업 고용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

- **청년층 취업 지원 시스템 강화** : 교육과 직업의 연계 강화, 고용 촉진 기금 마련 등을 통해 청년층 취업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 교육과 직업 훈련 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하고, 여기에 기업 고용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청년 실업을 방지
  - ‘고용 촉진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여 비정규직 고용자를 포함한 청년층의 취업 훈련이나 전문 직업 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고용가능성을 제고시켜야 함
  
- **중장기적인 고용 구조 개선 노력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정책이나 교육정책 등 타 분야의 정부 정책과 고용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고용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수출 경기 급랭 방지) 수출 마케팅 강화, 패키지형 외교 지속 등을 통해 수출 경기 급랭을 방지해야 하며,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를 통해 이들의 경영 안정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수출 마케팅 강화** : 중국, 아세안 등 경기 부진세가 상대적으로 미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한 수출 마케팅 지원이 필요하며, 기업들도 이 지역이 더 이상 생산 기지가 아닌 소비의 새로운 축이라는 인식 하에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 필요함
  
- **패키지형 외교 지속** : 중동 등 자원보유국들에 대한 패키지 외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정적인 수출 시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현지 마케팅 지원 등도 필요함
  
-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 :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 결재 보증 강화, 원금 상환 기간 연장, 파생금융상품 피해로 인한 파산 방지 등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들이 자금 경색으로 경영난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함

< 주요 정책 과제 >

분야	내용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안정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야 초당적 협력</li> <li>- 노사정 협조 강화</li> <li>- 국민들의 위기 극복 동참 유도</li> <li>- 국가 IR 강화</li> </ul>
금융시장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국회 신속 처리</li> <li>- 증시 유동성 공급 대책 고려</li> <li>- 추가 금리 인하 검토</li> <li>- 국제 공조 강화</li> </ul>
내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가 안정</li> <li>- 가계 부실 예방</li> <li>- 과감한 투자 활성화 정책 추진</li> <li>- 부동산 경기 활성화 보완 대책</li> </ul>
재정의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세 및 부동산 정책 조속 추진</li> <li>- 재정 중기 균형 추구</li> </ul>
고용 창출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확대</li> <li>- 중소기업 고용 지원 확충</li> <li>- 청년층 취업 지원 시스템 강화</li> <li>- 중장기적인 고용 구조 개선 노력 필요</li> </ul>
수출 경기 급랭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마케팅 강화</li> <li>- 패키지형 외교 지속</li> <li>-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li> </ul>

<보론> 경제위기시 재정의 역할

1. 미국의 1930년대 '대공황'과 재정의 역할

-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Great Depression)기에 노동인구의 1/4이 실업상태(제조업 실업률 26.1%, 전체 18.2%)였으며, 1/3 이상의 은행이 문을 닫았고<sup>1)</sup>, 산업생산지수는 정점이었던 1929년에 비해 62%나 하락(1932년까지)
- 대공황의 타개를 위한 '뉴딜'<sup>2)</sup> 정책의 집행을 위해 재정지출 및 정부 역할이 급격히 증대함
  - 미국의 정부지출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공황을 기점으로 상당히 단절적으로 ('27년 11.7%에서 '32년 21.4%로) 증가했으며, 특히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연방정부'(중앙정부)로 비중이 이동했음

< 미국의 GNP 에 대한 정부지출의 비율 (1902~1960) >

(단위: %)

연도	총지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전체	군비지출 제외	전체	교부금 제외	전체	교부금 제외
1902	6.9	2.4	1.7	0.8	0.8	4.0	3.7
1913	8.0	2.4	1.8	1.0	1.0	4.9	4.6
1922	12.6	5.1	3.9	1.9	1.8	6.2	5.7
1927	11.7	3.7	3.0	2.1	2.0	6.6	6.0
1932	21.4	7.4	6.1	4.9	4.5	11.0	9.6
1936	20.3	11.1	10.0	4.7	3.8	7.3	5.4
1940	20.5	10.1	8.5	5.2	4.6	7.7	5.8
1950	24.7	15.7	9.3	5.3	4.5	6.0	4.4
1960	30.0	19.3	9.6	6.3	5.0	7.8	5.8

자료: 양동휴(2000), P.31에서 재인용

1) 1930년6월 미국의 상업은행 수는 23,855개에서 1933년6월에는 약60%에 해당하는 14,523개로 줄었음. (박경로, "1930년 미국 은행위기의 원인과 귀결", 2000)

2) '뉴딜'(New Deal)이란 대공황기에 "경기회복과 사회적 재분배에 목표를 두고 금융, 산업, 농업, 임금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여러 조치들"<sup>1)</sup>을 말하며, 1932년 대통령선거 당시 루즈벨트의 연설에서 처음 등장.

○ 청년실업의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공공취로' 사업을 벌임

- 1935년5월 내무부 산하에 공공사업청(WPA)<sup>3)</sup>이 설립되었는데, 이(WPA)는 고용과 기업활동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구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구임
- 이른바 '유수이론(Pump Priming Theory)<sup>4)</sup>에 토대를 두고, 도로와 공공건물의 건설 등 약 3만 4,000가지 사업에 총 42억 5,000만 달러 이상을 지출<sup>5)</sup>하였음
- 국영회사 형태의 '테네시계곡개발국(TVA)을 설립하여 1933년부터 1944년 사이에 9개의 주요 댐과 수많은 부속 댐을 건설
- 이를 통해 저렴한 전기와 질소비료를 공급했고, 아울러 수많은 일자리와 산업을 일으켰음
- 청년실업자 대상의 공공취로사업을 담당하는 '청년사업청'(NYA)을 신설
- 200명 단위의 '산림보호대'(CCC: Civilian Conservation Corps)를 전국적으로 조직하여 산림보호와 공원 및 도로 건설 등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함

2. 일본의 1990년대 '복합불황'과 재정의 역할

○ 일본의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한 '복합불황'<sup>6)</sup>기에 연평균 경제(GDP)성장률은 1980년대의 3.8%대에서 0.7%대로 급격하게 떨어졌으며, 과잉설비-과잉채무-과잉고용(소위 '3과잉')의 조정에 10여년 소요됨

○ 일본의 경우, 지속적인 '공공투자' 확대와 '규제완화'(구조개혁)이 불황 극복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버블 붕괴 이후 공공사업의 확대로 일본의 건설부문 취업자수가 '97년 685만명으로 10년동안 150만명 증가했으며, '90년 이후에도 100만명 증가함.
- '90년대 전반기의 경기침체가 마무리되는 듯하자, 일본 정부는 '98년 4월 '재정구조개혁법'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재정 긴축이 경기 회복을 지연<sup>7)</sup>시킴

3) 이 기구(Works Progress Administration)는 토목사업청(Civil Works Administration)과 더불어 뉴딜의 구호정책을 대표함 (강성원, "뉴딜 구호정책의 성과"(2000)).

4)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공공투자) 정책을 유수(誘水, '마중물')정책(pump priming policy)이라 부름.

5) 이주영 역, 『뉴유딜정책』 (Paul K. Conkin, [The New Deal(1963)]), 탐구당(1976), p.71

6) 일본 교토대학의 미야자키(宮崎義一)교수가 처음 사용함. 1980년대의 호황기에 발생한 버블의 붕괴로 자산디플레이가 발생하고, 이어서 실물경제가 후퇴하며, 이후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불황이 장기화되는 현상을 지칭함.

- 소비세율 인상(3%→5%)과 특별감세(총 2조 엔 규모) 폐지,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총 9조 엔(GDP의 1.8%)의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킴
- 이에 따라, 1998년 11월 23조 9,000억 엔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긴급 경제대책을 다시 발표하기에 이룸.
- 위와 같은 ‘공공투자’ 사업이 재정 적자를 키웠다는 비판도 있으나, 21세기 이후의 일본경제 회복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아울러, 2000년 이후 ‘고이즈미’ 前수상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규제완화에 매진한 결과 제조업의 부활과 경기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평가<sup>8)</sup>임

### 3.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와 재정지출 확대

○ 1997년의 외환위기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었으며, 1998년과 1999년의 과감한 재정지출과 赤字재정을 통해 빠른 경기회복에 기여함

- 통합재정수지는 1997년, 1998년, 1999년 3년 연속 적자 (각각 -1.4%, -3.9%, -2.5%)를 기록했으나, 그 후 2007년까지 8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08년 새 정부에서 20조원 이상의 감세안을 발표한 바 있으므로,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할 여력은 많지 않지만, ‘적자재정’의 비율을 더 높이는 등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제고에 기여할 것임

< 통합재정지출의 GDP대비 비율 >

연도	1995	1997	1998	1999	2000	2002	2004	2006
비율 (%)	18.0	20.4	23.8	22.9	22.3	19.9	22.3	24.3

자료: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주: 통합재정지출은 세출과 순융자의 합으로, 세출과 총융자의 합인 총지출과 다름.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 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현 석 원    연구위원 (3669-4024, kyotohyun@hri.co.kr)

7) 류관영-사공목, “일본의 복합불황 대책과 시사점”, 산업연구원(1999), p.3

8) 매경ECONOMY, 2008년7월9일자